

## TPP 해체 이후 일본의 통상전략

\* 이 자료는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발표한(이코노미스트아이스 : 「일본의 4정면통상전략과 지역통상질서」 (2017.11.30.)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일본의 통상전략은 2017년 1월 미국의 TPP탈퇴에 따른 TPP해체 이후, 일본·EU EPA의 큰틀 합의, TPP의 대체책인 TPP11의 큰틀 합의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일본은 다국 간 질 높은 규범/규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2국간교섭으로 상대국시장의 개방을 밀어붙이는 미국과, 자국의 정책에 제약이 되지 않는 보다 완만한 협정을 지향하는 중국 등과 타협을 보기가 어려워 앞으로는 어려운 국면도 예상됨
- 특히 일본은 남아 있는 2개의 교섭·대화, 즉 미일경제대화, RCEP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당면의 과제로 되고 있음

### □ 4대 교섭·대화 전략

- 일본의 통상전략은 2012년 말 아베정부 출범이후 TPP가 중심이 되어왔음
  -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고도의 규범/규정을 지닌 TPP를 조기발효시킴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교섭중인 여타 메가 FTA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미일 주도로 아태 지역 전체와 WTO하에서의 글로벌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하여, 21세기형이라 불리는 고도의 규범/규정 책정으로 이어지도록 함을 목표로 해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TPP를 토대로 한 일본의 통상전략은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재고가 불가피해졌음
-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표방하고 이국간교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출범직후 TPP탈퇴를 표명에 따라 TPP는 발효되지 못하게 됨
- 통상전략의 재구축이 절실한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TPP를 장기적으로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TPP 합의의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미국의 복귀를 촉구해 나가기 위한 대체책을 모색해왔는데 그 대체책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TPP11임
- 2017년 2월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미일 간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틀로서 「미일경제대화」 설치에 합의하고, 나아가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지역 레벨의 진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 (공동성명)에 관하여 미국의 이해를 얻었음

- 이에 힘입어 일본은 기존의 이니셔티브인 TPP를 기초로 한 ①TPP11, ②미일경제 대화, ③교섭중인 EU·일본 EPA(경제제휴협정), 나아가서는 ④RCEP 등 4개의 교섭/대화를 동시에 추진해나가는 「4개 교섭·대화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함
-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EU·일본 EPA교섭의 큰틀 합의, 11월에는 TPP11(정식 명칭 :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의 큰틀 합의를 실현함
- EU·일본 EPA에 대해서는 2017년 중으로 최종합의도 시야에 두고 있음
- 앞으로는 EU·일본 EPA와 TPP11을 서명·발효까지 이르게 하는 동시에 남은 2개의 교섭/대화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당면과제임

#### □ RCEP교섭의 난항

- 그러나 RCEP교섭은 난항중임. 11월 14일 개최된 RCEP 정상회담에서는 목표로 되어 있던 2017년 중 기본합의는 단념되었음
  - 동 회의에서는 교섭타결을 위해 2018년에 가일층 노력하는 것(공동성명)만이 합의 되어 교섭타결의 목표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었음
- 교섭난항의 이유는 16개 참가국들의 이해가 엇갈려 조율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대립구도는 크게 질 높은 협정을 지향하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자국의 정책에 제약이 되지 않는 보다 완만한 협정을 지향하는 중국 등 신흥국으로 될 것으로 보임
  - 선진국들은 TPP11로 실현된 고수준의 자유화와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고도의 규범/규정에 가능한 한 근접하는 내용을 RCEP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중국과 인도, ASEAN의 일부 국가는 상품무역(관세)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투자도 포함한 고수준의 자유화에 난색을 표하고 국내 산업정책을 제약할지 모르는 국내시장의 개방이나 국내규제·제도의 변경에도 이어지는 고도의 규범/규제의 수용에 반대·주저하고 있음
- 일본은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참가국들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규정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더하여 능력구축 등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RCEP를 질 높은 협정으로 하는 것에 신흥국들의 이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일본과 ASEAN국가들과는 RCEP 실현을 위한 일본·ASEAN 협력패키지를 책정하는데 이미 합의하고 있음
- 그러나 난항중인 교섭을 타개하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음. RCEP의 질을 둘러싸고 2018년도 어려운 교섭이 계속될 전망이다


## □ 미일경제대화도 어려운 국면

- 한편 미일경제대화도 앞으로 일본이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 11월 5일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FTA에 관하여 언급할 것인가가 주목 점의 하나였음
  - 이 점에서는 미일 간 견해차이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지금 바로 미일FTA교섭이 개시되는 상황이 아님은 확실함
- NAFTA와 한미FTA의 재교섭, 막대한 대미무역흑자를 안고 있는 중국과의 2국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미일 FTA는 현시점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으로 미국이 미일경제대화에서 일본에게 거센 시 장개방요구로 밀어붙이는 것을 상정해두어야만 함. 미국이 동대화에 의해 일본의 시장개방에 의한 대일무역 적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임
  - 이것이 언젠가 미일FTA교섭개시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일본은 미일경제대화를 통하여 미일협력에 의한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 규범/규정 제정과 미국의 TPP 복귀를 위한 환경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을 TPP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TPP11, 일EU·EPA, RCEP를 조기에 합의·발효시켜 미국의 기업과 수출업자들이 이들 협정참가국들의 경합자에 비하여 일본 및 아시아 시장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조출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런 연후에 미일경제대화를 잘 운영하여 일본시장의 대폭개방이나 미일FTA 체결을 피하고 미국 내 TPP 복귀 압력을 높여야만 함

- 이와 관련하여 11월 10일 APEC·CEO서미트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우리의 양손을 묶어놓고 주권을 포기시켜 유익 한 규범/규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대형 협정에 참가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TPP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연설을 함
- TPP복귀를 부정하고 2국간교섭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트럼프정권과 대치하고 미일경제대화에서 미국의 심한 대일요구를 희석시켜나가는 것은 일본으로서 매우 어려운 작업임

#### □ 아태 지역의 통상질서 형성을 둘러싼 경쟁은 계속

- 일본은 이들 4개 전략을 통하여 고수준의 자유화와 고도의 규범/규정을 글로벌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태지역에서는 TPP11을 토대로 하여 동지역 전역을 포함한 아태자유무역권(FTAAP)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그러나 아태 지역의 2대국, 미국과 중국은 각각 일본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
-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방문에 의해 미국제일의 기치 하에 공존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2국간 교섭으로 상대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무역적자 삭감을 실현하는 통상전략을 명확히 함
- 이번 방문한 베트남과 필리핀사이에서는 FTA교섭개시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보이고 있음
- 미국은 NAFTA나 한미FTA의 재교섭과 맞추어 아태지역에서 미국을 허브로 하는 허브 앤 스포크형의 2국간 FTA망 구축을 앞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본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님
- 일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태지역 전체에 확대된 일본기업의 가치사슬을 포함하는 다국 간 FTA의 형성이며 미국에 의한 2국간 FTA망 구축은 이것을 저해할지 모름.
- 또한 NAFTA 재검토교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엄격한 원산지규칙이나 환율조항(환율 조작에 대한 대항조치의 발동 등)와 같은 규범/규정이 미국에 의해 확대되고 동지역의 공통된 규범/규율이 되는 것은 일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한편, 중국 등이 바라고 있는 완만한 자유화 규범/규정이 확대되는 것도 일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일본기업이 역내에서 원활하게 사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TPP에서 합의된 상품 무역이나 서비스·투자에 대한 고수준의 자유화나, 전자상거래와 정부조달, 국영기업,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고도의 규범/규정을 동 지역에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은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는 미국에 반발, 이번 APEC·CEO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유무역과 다국간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호소했음. 그러나 RCEP 교섭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질 높은 협정에는 저항을 하고 있음
- 아태 지역에서 다국 간 질 높은 규범/규정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통상정책은 미국의 전략과도 중국 등의 일부 신흥국들이 바라는 것과도 다름
- 일본은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통상질서 형성을 둘러싸고, 이들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TPP11 참가국 등과 협력하여 일본에게 바람직한 규범/규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함. 

<참고자료>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opinion/eyes/pdf/eyes171130.pdf>